

제15권 3호

2025. 2. 10~2025. 2. 23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AI 지정학 시대, 국내 금융 AI 규제 균형잡기 |
| 이슈분석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
| 금융경영브리프 | 美 LA 산불로 보험사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부상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확대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강미정(ashleykang)
연구원	유승원(youth1)

논단

연구위원	류창원(cwryu)
------	------------

이슈분석

연구위원	주윤신(ysju)
------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안혜영(mith5)
연구원	이시온(sieunyi)

금융지표

연구원	정안선(ansunc)
-----	-------------

제15권 3호

2025. 2. 10~2025. 2. 23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AI 지정학 시대, 국내 금융 AI 규제 균형잡기
- 04 **이슈분석**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 08 **금융경영브리프** 美 LA 산불로 보험사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부상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확대
- 12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AI 지정학 시대, 국내 금융 AI 규제 of 균형잡기*

류 창 원 연구위원

트럼프의 AI 규제 완화 행정명령과 중국 가성비 AI모델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글로벌 ‘AI 지정학’ 시대가 열렸다. 한편 국내에서는 작년 말 AI 산업육성과 규제를 포괄하는 ‘AI 기본법’이 통과되었는데 금융 AI 분야에서도 세부 사항 정비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급격한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보다는 금융회사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혁신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도 AI거버넌스 구축과 AI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 가속화되는 글로벌 AI 전쟁, 규제와 혁신의 ‘AI의 지정학’

미국 대통령에 복귀한 트럼프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취임 직후 100여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10월 발표한 ‘AI 행정명령’도 폐기하였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강력한 AI 규제 법안을 마련한 EU와 달리, 미국은 AI 규제가 강하지 않다.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 역시 AI의 위험성을 직접 규제한 법률은 아니다. 안전과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최소한의 영역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연방정부 역할과 책임, 주요 조치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본을 유치하여 오픈AI, 오라클과 ‘스타게이트’라는 합작사를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대규모 AI 투자 계획을 발표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AI 스타트업이 개발한 AI로,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챗봇인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오픈소스 모델과 저렴한 칩을 활용하여 챗GPT의 1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으로 대등한 성능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일부 인사는 이를 ‘AI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언급하였다. 소련과의 인공위성 개발 경쟁에서 등장했던 충격을 연상케 한다는 뜻이다. 투자비용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딥시크는 미국의 AI 투자가 과잉이 아니었나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드웨어에 치중했던 자본시장 전체에도 큰 충격파를 던졌다. AI의 보편화, 대중화가 촉진됨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가간 치열한 AI 패권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 가성비 AI모델 ‘딥시크(DeepSeek)’ 등장으로 국가간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걸음마 단계인 국내 AI 산업, 지난해 말 ‘AI 기본법’이 제정

미국과 중국에 비해 국내 AI산업은 걸음마 단계이나 경쟁력 제고 가능성은 상존

앞서가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국내 AI 산업은 걸음마 단계이다. 일부 반도체 역량을 제외하고 데이터의 양과 질, 인재, 컴퓨팅 파워 등 AI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에서 모두 열위이다. 주요 플랫폼 회사들은 한국어 특화 모델 또는 여러 오픈소스 모델을 조합하는 방식 등으로 미국 빅테크와 차별화된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딥시크와 같이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수요가 많은 특화 분야에 집중하여 AI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경쟁력 제고 가능성은 열려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산업육성 및 규제가 포괄적으로 제시된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세부 사항 제정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등 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등을 정의하였다. EU AI법에 제시된 ‘고위험’이라는 용어 대신 ‘고영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제 수준을 다소 낮춘 것으로 보인다. 고영향,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 의무도 부과하고, 과태료 기준도 마련하였다. EU의 경우 매출액 7%의 벌금 부과, 허용불가능 AI 개발 제한 등 제재 수준이 높은 반면, 국내 AI 기본법에서는 최대 5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U 대비 규제 수준이 낮으나 다양한 준수 의무와 과태료는 특히 신생 AI 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AI 기본법 이후 금융 분야에서도 AI 규제 정비 필요

‘AI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금융분야 AI 규제 방향도 명확히 설정될 필요

AI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도 대응도 시급하다. 정부는 2019년 AI 강국을 비전으로 AI 국가전략을 수립한 이후 각 부처별로 AI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모범규준에 기반한 자율규제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본법 제정, 트럼프의 규제완화, 딥시크 출현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규제 방향과 수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금융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AI 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의한 가운데, 예시 영역으로 대출 심사를 들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고영향 AI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중대한 영향과 위협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과도하게 많은 금융 업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AI 기본법에서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개발한 AI 서비스의 고영향 모델 여부에 대한 문의를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는지 확정하고, 금융위원회는 심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인공지능사업자가 되는 금융회사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영향평가(제35조) 기준도 마련하여야 한다.

❖ AI가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규제와 혁신간 조화 필요

보스턴컨설팅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산업이 AI 발전으로 전례없는 생산성 혁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0년간 소매금융의 생산성은 인플레이션과 비교했을 때 거의 높아지지 않았던 반면, 향후 10년의 변화는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직 국내 금융산업의 AI 활용은 초기 단계이다. 금융회사의 인식도 미흡한 편이다. 막대한 투자 규모와 빠른 기술 발전, 부족한 인재도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이미 많은 금융회사 직원들은 개인적인 구독을 통해 해외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망분리 규제 완화로 사내 AI 활용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딥시크 이후 보다 저렴한 AI 모델이 등장한다면 국내 금융회사의 AI 활용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AI 기본법에 따른 세부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 금융 분야에 과도한 의무가 부여된다면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미국과 중국에서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는 점을 눈여겨 봐야한다.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도 과도한 규제보다는 혁신과 균형을 이룬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회사들도 선제적으로 ‘AI 전환(AI Transformation)’을 추진해야 한다.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신용평가 등 고영향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설명가능한 AI(XAI)’를 발전시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전문 인력 육성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사람의 강점을 결합하는 영업모델로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AI가 향후 금융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금융 AI분야는 초기

국내 금융회사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금융 AI 분야의 규제와 혁신 간 균형 필요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AI 전환’ 노력도 중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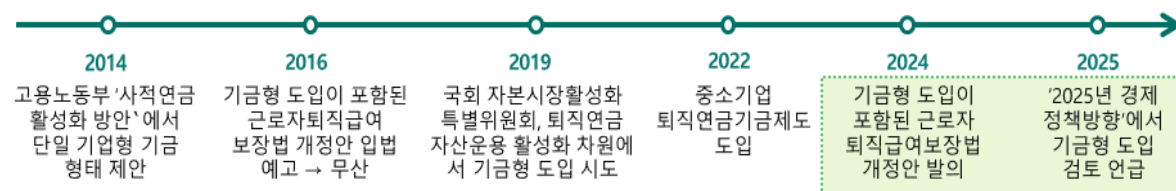
주 윤 신 연구위원

과거 몇 차례 도입이 무산됐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재개되었다. 퇴직연금 시장 내 국민연금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금융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시장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기금형 도입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형 제도 도입시 연금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률 경쟁이 본격화되는 한편 OCIO 시장 확대와 맞물려 운용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니어 자산관리의 중심인 퇴직연금 시장의 변화에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금융업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최근 재개

- 작년 8월과 11월 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을 도입하여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과거에도 몇 차례 도입이 검토된 바 있으나,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
- 기금형 제도는 운영의 책임성과 자산운용 전문성을 제고하여 기존 계약형 제도의 낮은 수익률을 보완하고 노후소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일반적으로 기금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며,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22년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외에는 대부분 계약형으로 운영¹⁾
 - 현행 계약형 제도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보수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아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해당 논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했으나, 금년 초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며 향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기금형 제도 도입 추진 경과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1] 계약형은 가입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처를 선택하는 반면, 기금형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수탁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고, 사용자, 근로자 대표, 자산운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제도 운영 전반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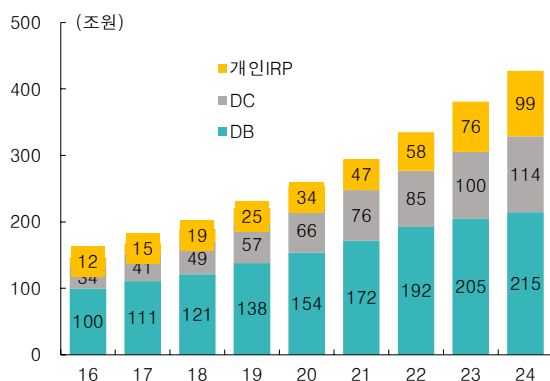
■ 現 논의되고 있는 주요 개혁방안은 수탁법인으로 공적·민간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

- 퇴직연금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수탁법인과 관련해서 공적·민간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제도 도입이 검토
 - 당초 개정안에서는 수탁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기관도 참여하는 형태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특히, 작년 8월 발의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100인 초과 사업장 대상 기금형 사업자로 국민연금을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
 - 근로자 10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100명 초과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형태

■ 퇴직연금 시장 내 국민연금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금융권에서는 반발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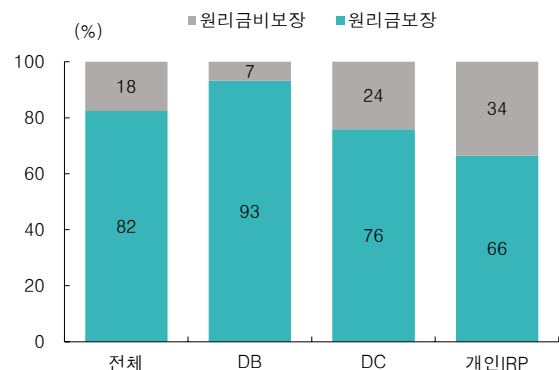
- 과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자체에도 부정적이었던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국민연금공단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자 거세게 반발
 - 작년 10월 정부 부처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기금형 도입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도 정부에 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를 반대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고, 향후 입법 추진 상황에 따른 공동 대응을 준비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각각 수령 방식이나 장단기 운용 방식이 달라 수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국민연금이 공·사적영역 모두에 참여시 연금시장에 과도한 영향력을 끼쳐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
 - 수급연령이 정해져 있어 초장기 투자가 가능한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투자기간을 정할 수 있어 장기 운용에 일부 한계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자산 비중 ('24년말)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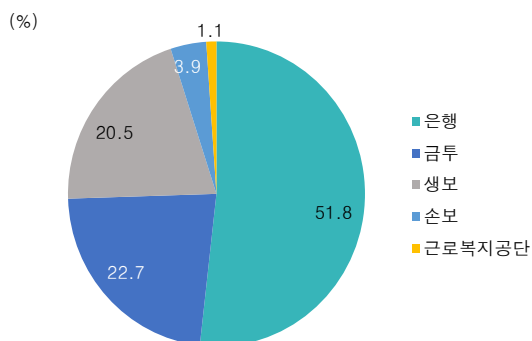
■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기금형 도입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

- '22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도입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미 기금형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양호한 수익률로 성공적으로 안착된 것으로 평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의 출범 이후 2년간 누적 수익률은 12.8% 수준으로, 지난 5년간('19~23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 2.35% 대비 높은 편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개혁 지연으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과 정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기금형 퇴직연금의 입법화 가능성이 확대
 - 다만,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제도 도입시기는 다소 불투명
 - 금융업권의 반대가 거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사업자 참여 여부는 쟁점 사항으로 논의가 지속될 전망

■ 기금형 도입시 퇴직연금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수익률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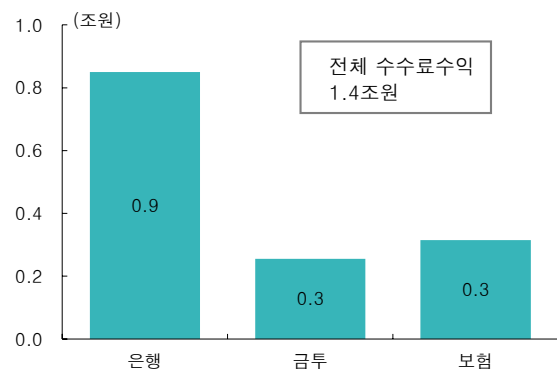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시 이를 운용하는 전문 조직과 現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증권, 보험사간 경쟁 심화로 수익률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기존 퇴직연금 사업이 거래 관계 및 마케팅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각되며 운용 역량과 비용 효율성이 중요
- 이에 따라 운용 역량이 우수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재편되며, 은행 등 기존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 및 수수료수익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3년 퇴직연금 사업자 수수료수익 규모는 1.4조원이며, 이 중 64%가 은행에 귀속
-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가 확정될 경우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위축되고 국민연금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재편될 가능성도 존재

■ 퇴직연금 적립금 금융권역별 비중 ('23년말)



자료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사업자 수수료수익 규모 ('23년 연간)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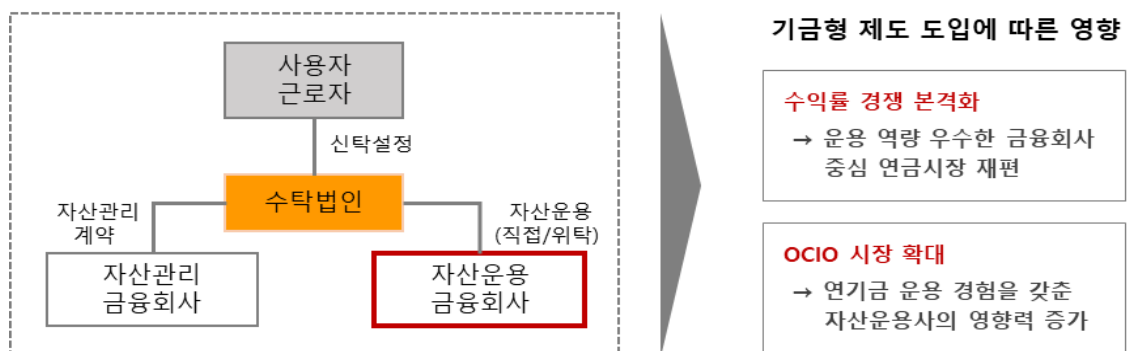
■ OCIO 시장 확대와 맞물려 자산운용사의 연금시장 내 영향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금형 체제에서는 별도 독립된 수탁법인이 연금자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시장 확대가 전망
- 특히, 위탁운용사로서 연기금 운용 경험을 갖춘 자산운용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동 시장 내 영향력을 크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現 운용사들은 근로자를 대면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상품 제공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나, 기금형 도입시 수탁법인과 직접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
- 퇴직연금 시장을 보고 후발주자로 OCIO 시장에 뛰어든 증권사의 경우, 퇴직연금의 일임 위탁이 허용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운용사와의 경쟁에 다소 제약
 - 현행 법규상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일임이 허용되지 않으며, 현재는 운용사의 사모펀드 형태 등으로 OCIO 펀드가 운영되고 있고 증권사는 자문만 가능

■ 금융회사들은 시니어 자산관리의 중심인 퇴직연금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고령화와 맞물려 시니어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도 기금형 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
- 금융회사들은 향후 퇴직연금 사업의 궁극적인 경쟁력이 자산운용 역량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OCIO 관련 트랙레코드 구축 노력을 지속
 - 최근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일부 후발주자들이 OCIO 관련 조직을 축소·폐지하고 있기는 하나, 기금형 도입 가능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기존 사업자들도 경쟁 심화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RA 일임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한 퇴직연금서비스 전문화와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 

■ 기금형 제도 도입시 퇴직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료 : 고용노동부, 하나금융연구소

美 LA 산불로 보험사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부상

안혜영 연구위원

최근 美 LA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인해 美주택보험 회사의 재정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및 재난 발생 위험 지역의 사업 철수로 이어지고 있어 보장공백 확대도 우려된다. 기후변화 발생 피해가 현실화되자 해외 보험사들은 기후변화 위험 평가모형 개선, 지수형 보험 도입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국내 보험사도 기후 리스크 분석과 예방적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美 LA에서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1]

- '25년 1/7 美 캘리포니아 LA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산불이 국지성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번지면서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
- 약 20일 이상 이어진 LA 산불은 해당 지역에 큰 비가 내리면서 진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1/30 기준) 최악의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파악
 - 피해 면적은 약 193.8km²(서울의 약 1/3), 파손 건물은 1.2만 채 등으로 추산
- 이번 LA 산불로 인한 보험업계의 손실은 약 3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초대형 보험사보다는 올스테이트, 처브, 트래블러스 등 주택보험사의 피해가 클 전망
 - 스위스 '처브(Chubb)'는 이번 LA 대형 산불로 인한 1분기 손실액을 15억 달러로 추산

■ LA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확대로 보험사 재정악화 우려 증대

-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美 주택보험사는 관련 손실이 증가한 데다 인플레이션으로 주택복구 비용도 늘어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
 - 전 세계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은 2,750억 달러('22년)에서 3,200억 달러('24년)로 증가했고, 동기간 관련 보험 지급액도 1,25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로 증가
- 이에 美 보험사들은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들은 해당 지역 내 사업을 축소 또는 철수하는 방식으로 대응
 - '21~'23년 사이 미국 주택소유자의 평균 주택보험료는 19.8% 상승
 - 美보험사인 올스테이트, 아메리칸 내셔널, 스테이트팜 등은 지난 '22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캘리포니아주 주택에 대한 신규 화재보험 제공을 중단

[1] "Insurers brace for losses of up to \$20bn from California wildfires", FT, 2025.1.10

- 美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의 철수로 주정부의 페어플랜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 위험 지역 내 미보험 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보장공백 우려가 상승
 - 캘리포니아(산불), 텍사스(허리케인) 지역 이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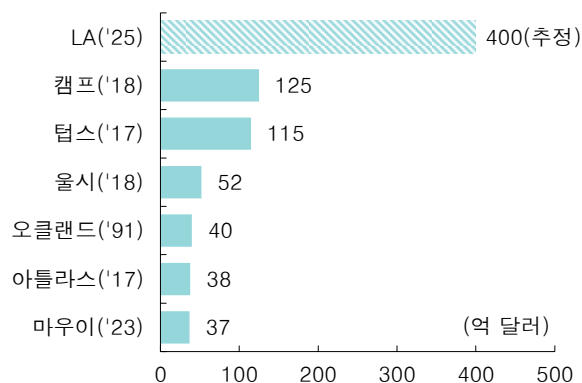
■ 보험업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新평가모델 구축, 지수형 보험을 도입 중

- 글로벌 보험사들은 최근 증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AI 기반 모델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평가모델을 구축
 - 日 솜포는 자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 프레임워크를 구축
 - 호주 보험사 선코프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방법을 고도화
- 기후변화와 같이 전통 보험시장에서는 고려하지 않던 유형의 리스크가 증가하자 美, 日, 유럽 등에서는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Parametric) 보험 도입이 확대
 -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조건 충족 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상품으로 美 AIG, 佛 AXA는 강수량 지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상품을 판매 중

■ 국내에서도 자연재해 발생과 피해가 확대되는 만큼 보험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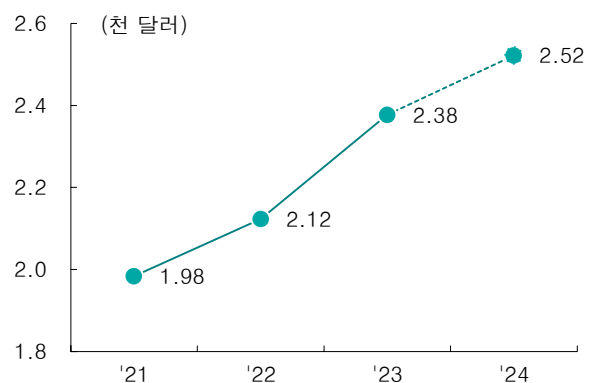
- 한국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년 증가하므로 국내 보험사도 보험상품 다양화, 투자자산 다각화, 기후변화 예측 모델 개발 등을 통한 대응 노력이 필요
 - 국내에 맞는 기후변화 정보 확보를 위해 기상청 및 테크 기업과의 협업 필요
- 보험사들은 단순히 발생 손실을 보상하는 것 외에도 기후 리스크의 정확한 분석, 예방적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탈탄소화 투자 등도 고려
 - 보험계약자가 기후적응조치를 취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 

■ 미국의 역대 산불 피해액 현황



주 : 각 산불의 피해액 규모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산정
자료 : JP모건체이스

■ 미국 주택소유자의 연평균 주택 보험료 추이



자료 : Analysis of Insurify data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확대

이 시 온 연구원

SC는 UAE에 이어 룩셈부르크에서도 가상자산 수탁(custody)서비스를 개시하고, EU를 비롯해 전 세계로의 서비스 확장을 계획 중이다. 최근 미국이 가상자산 수탁 관련 규제들을 완화함에 따라 대형은행들이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들도 가상자산이 제도화되고 수탁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후를 활용하여 가상자산 수탁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국내 은행들은 국내외 성장세를 모니터링하며 미래 신사업 기회를 발굴·점검할 필요가 있다.

■ SC는 룩셈부르크에서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출시하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

- SC는 룩셈부르크에서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개시('25.1월)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 SC는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바 있으며, 당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수탁서비스를 제공('24.9월)
- 이를 시작으로 SC는 가상자산 수탁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으로 올해 말부터는 다른 가상자산들도 서비스 대상에 추가할 계획
 - 향후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EU를 비롯해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전략

■ 이는 가상자산 수탁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른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

- 최근 전 세계적인 가상자산의 성장과 함께 글로벌 수탁시장의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로, '33년까지 4.63조 달러로 연평균 2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1]
- 미국도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사업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미국 은행들의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진출 및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美 SEC는 디지털자산 규제개선 전담조직(TF)을 신설하고, 금융기관이 손님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기록하도록 한 SAB121 규정을 폐지('25.1월)
 -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관심을 보이던 미국의 대형은행(JP Morgan, Citi, State Street, BNY Mellon)들은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올해부터 강화할 전망^[2]

[1] "Digital Asset Custody Market Size, Share, Growth, and Industry Analysis", Business Research Insights, 2025.01.13

[2] "Cryptocurrency & Bitcoin Predictions for 2025", Galaxy Research, 2024.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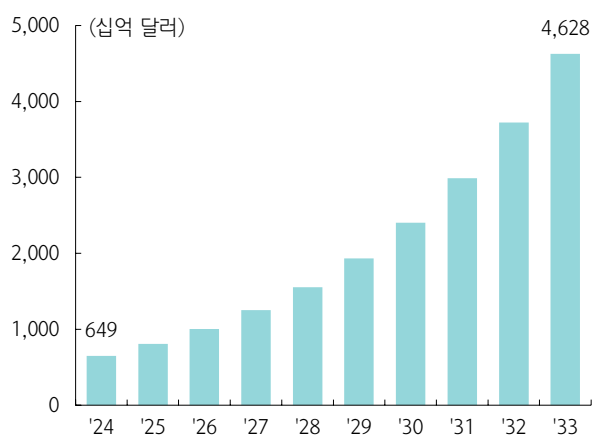
■ 한편,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수탁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 수탁시장의 성장이 기대

- 법인의 실명 가상계좌 발급 제한,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제한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수탁시장의 규모는 작은 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상자산 수탁고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22.12월 1.6조원에서 '24.6월 13.8조원으로 급성장^[3]
- 게다가 최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24.7월)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화되고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있어 향후 가상자산 수탁시장의 성장세 가속화 기대
 - 금융위는 올해부터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2단계법을 추진할 계획^[4]

■ 국내은행들은 가상자산 수탁시장 간접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향후 기민한 대응 필요

- 국내 시중은행은 제후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수탁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
 -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합작법인인 한국디지털에셋을 설립('20년)하고, 한국 디지털자산수탁에 지분 투자('21년)하며 선제적 기반을 구축
 -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해 말 지분 투자에 기반한 협업을 활용하여 가상자산 수탁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타진
- 향후 국내은행도 글로벌 흐름에 따른 국내 규제·시장 동태를 주시하며 접근할 필요
 - 국내은행들은 전 세계 및 국내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및 시장 성장세에 발맞추어 가상자산 수탁업의 미래 신사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점검하고, 기회를 발굴할 필요 

■ 전 세계 디지털자산 수탁시장의 규모 추정



자료 : Business Research Insights

■ 국내 시중은행들의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은행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하나	비트고 코리아(글로벌 수탁 기업인 비트고의 한국법인) 지분 25% 취득('24.9월)
KB	해치랩스, 해시드 등과 합작법인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20.11월)
신한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지분 투자('21.1월), KDAC은 카르도(KARDO)를 합병('24.6월)
우리	비덱스(BDACS)에 지분 투자('24.12월)
농협	카르도(KARDO)에 지분 투자('21.9월)

자료 : 각종 보도자료 취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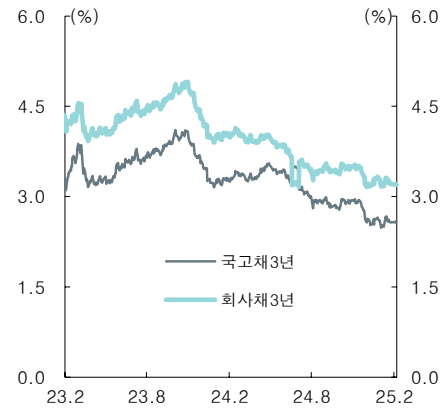
[3] “'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2024.10.31

[4]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 금융위원회, 2025.01.08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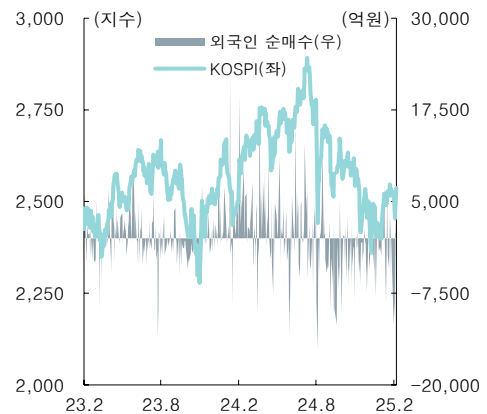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12월말	3.33	3.39	3.01	3.28	2.60	2.76
1월 31일	3.07	3.03	2.81	3.20	2.57	2.70
2월 3일	2.99	3.02	2.83	3.20	2.57	2.69
2월 4일	2.92	3.00	2.83	3.21	2.58	2.70
2월 5일	2.98	3.01	2.82	3.20	2.58	2.68
2월 6일	3.00	2.99	2.82	3.20	2.58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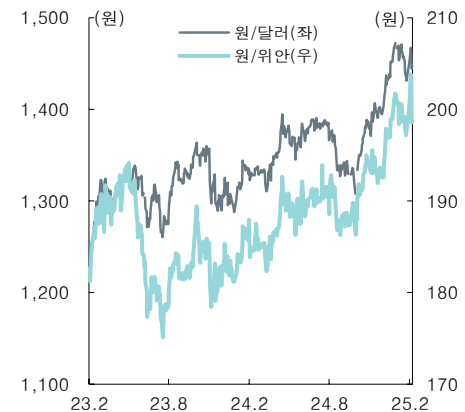
::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12월말	2,399.5	53,155	304	-1,207
1월 31일	2,517.4	137,594	454	-11,756
2월 3일	2,454.0	116,500	523	-8,707
2월 4일	2,481.7	110,009	479	772
2월 5일	2,509.3	99,496	437	656
2월 6일	2,536.8	118,630	480	3,556



::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12월말	1,435.5	928.0	197.0	1,487.9
1월 31일	1,452.7	936.8	200.4	1,507.0
2월 3일	1,467.2	948.3	203.8	1,510.4
2월 4일	1,462.9	948.3	203.6	1,519.3
2월 5일	1,444.3	945.8	198.6	1,502.8
2월 6일	1,447.7	955.4	198.6	1,5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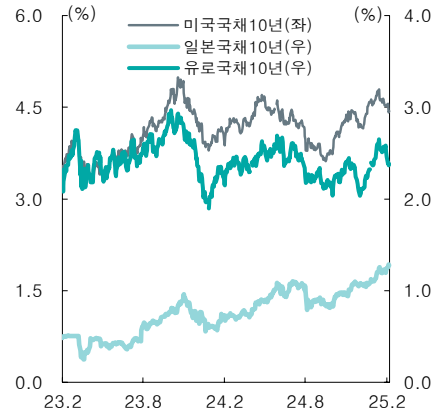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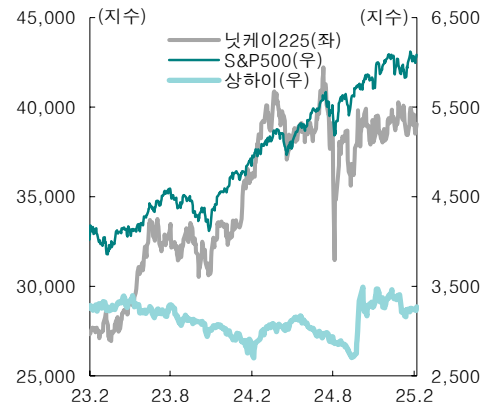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 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12월말	4.33	4.31	4.24	4.57	1.10	2.37
1월 31일	4.33	4.30	4.20	4.54	1.25	2.46
2월 3일	4.33	4.30	4.25	4.56	1.25	2.39
2월 4일	4.33	4.30	4.21	4.51	1.28	2.40
2월 5일	4.33	4.30	4.19	4.42	1.29	2.37
2월 6일	-	4.30	4.21	4.43	1.28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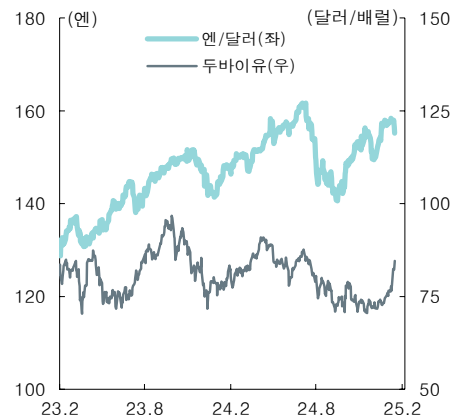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12월말	5,881.6	39,894.5	3,351.8	4,896.0
1월 31일	6,040.53	39,572.49	-	5,286.9
2월 3일	5,994.57	38,520.09	-	5,217.9
2월 4일	6,037.88	38,798.37	-	5,264.6
2월 5일	6,061.48	38,831.48	3,229.49	5,271.1
2월 6일	6,083.57	39,066.53	3,270.66	5,356.6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12월말	157.36	1.036	75.9	2,641.0
1월 31일	155.09	1.029	79.9	2,835.0
2월 3일	154.70	1.038	79.0	2,857.1
2월 4일	154.26	1.040	77.5	2,875.8
2월 5일	152.68	1.039	78.4	2,893.0
2월 6일	151.52	1.039	77.5	2,880.2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3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5년 2월 7일 인쇄

2025년 2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3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